

밤그릇 다툼에 멍드는 교육자치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5명의 교육의원들이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장 선출 및 회의의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독단적 운영을 일삼고 있다며 의정활동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일선 학교 통폐합 문제 등을 담은 교육 현안에 대한 조례안 등에 대한 충분한 심의 및 의결이 이뤄지지 못한 채 차질이 빚어지면서 회의에 대한 도민들의 눈총이 따깝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도교육청이 발의한 '전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의했지만 전체 교육위 소속 9명 중 교육의원 5명이 불참,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하지 못했다.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복식수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와 교육재정 운영 효율성을 위해 9월 1일자로 병설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6곳을 폐지하고 초등 4곳과

중학교 1곳을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게 골자다.

도교육위 파행 장기화... 학교 통폐합 등 의결 못해

하지만, 교육위의 파행 운영으로 조례안은 의결되지 못해 당장 2학기부터 이들 학교에 대한 통폐합 등 교육청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당장, 30명이 재학중인 영암 시종초 신학분교와 19명이 다니는 담양 남면초 인암분교는 지역민들의 요구에 따라 2학기부터 시종초와 남면초로 통합할 계획이나 조례안 미처리로 내년 3월로 미뤄지게 됐다. 이들 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복식수업 등 교육의 질 하락으로 분교 통합에 대한 학부모의 여론이 높았던 지역이다.

또 여수 돌산초 송도분교 등 4곳의 초등학교 분교도 학생이 1명도 없는 데도 폐지가 불가능하게 됐

는 27일 폐회하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처리는 힘든 상황이다. 의장의 분회의 직권 상정 가능성도 흘러나오지만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데다, 교육청의 적극적인 요청도 없어 의장 단독으로 직권 상정을 하기에는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호균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교육의원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 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난감하다"면서 "상임위 차원에서 문제를 푸는 게 현재는 가장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교육위원을 비롯한 회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대안을 제시하기는 커녕, 회의 내에서도 민주당과 교육의원으로 갈라져 '집안 싸움'만 벌이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등 도민 대표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김지경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장관들이 21일 사상 처음으로 최전방을 동반 방문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이날 오전 유영환 장관과 김태영 장관의 안내로 판문점을 찾아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 불법 금융거래 차단... 자산동결도 검토”

한미 2+2회의의 “北 무책임한 행동시 심각한 결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1일 천안함 사건 후속대응과 관련, “(핵) 확산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거래주체에 대해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하고 북한 무책임한 불법 활동과 관련 은행들의 불법적 금융거래 지원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특히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방식으로 북한 지도부에게 유입되는 돈을 차단하는 고강도 독자 금융제재를 검토중임을 시사해 천안함 후속대응을 둘러싸고 한미와 북한과의 긴장과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사상 첫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가진 뒤 서울 도렴동 외교교통상부 청사에서 가진 공

동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권한을 제공해 불법적인 북한의 활동을 중단하는 추가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이어 “추가 제재 이외에도 안보리 결의 1718, 1874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핵확산이나 불법 활동을 하는 주체들을 파악하고 압력을 가하고 거래를 중단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BDA식 금융제재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 “대북 제재는 북 한 지도부와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몇년전 우리는 국무부와 재무부를 통해 BDA 사건을 통해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어냈다”고 밝히, 이

를 긍정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6자회담 재개와 관련, 클린턴 장관은 “북한이 가능성있는 노력을 하고 6자가 모두 합의를 하면 6자회담 재개는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후계(승계)계획을 진행중이며 어찌든 도발행위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면밀히 주시하고 상당히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 양국은 2+2 직후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삼가라”며 “그와 같은 어떠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與 권력투쟁 불씨 살아나나

박영준, 정두언 겨냥 “영포 게이트는 허구”

홍준표 “친이·친박 등 계파 모임 해체해야”

잠시 잠잠하던 여권 내 권력투쟁 논란이 또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논쟁의 당사자인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최근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영포게이트는 허구”라고 밝히면서 논란의 상대 측인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을 비판했기 때문이다.

이 월간지 보도에 따르면 박 차장은 “정두언 의원이 (대통령직) 인수 위 인사를 거의 다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한 소장개혁 의원은 21일 “박 차장은 남이 뭘 했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자신이 권력사 유희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하라면 된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여기에 한나라당 내에는 국정 논란 세력의 발언색인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하고 이를 위해 “정 최고위원은 자신이 제기한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어 권력투쟁 논란을 재점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물론 한나라당은 재·보선을 앞두고 논란을 확산을 경계하고 있어 당장 불발을 가능성은 약하지만 재·보

선이 끝나면 즉각 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어수선한 상황에서 홍준표 최고위원이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의 진정한 화합과 통합을 이루어내려면 계파적 짝은 의원모임을 즉각 강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홍 최고위원은 친이 계이지만 특정 모임에 소속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내에는 친이계인 ‘함께 내일로’와 ‘국민통합포럼’, 친박계인 ‘여의포럼’과 ‘선진사회포럼’, 강제개혁 ‘동행’, 초선모임인 ‘선진과 통합’, 중도개혁과 모임인 ‘통합과 실용’ 등의 모임이 있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계파 모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진정 정당 화합의 출발점은 문제가 되고 있는 당내 계파의 해체다.”

계파모임이 존속된다면 안상수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추구하는 화합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해당행위가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계파가 엄존하는 당내 현실을 감안할 때 계파모임 해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 금지해야”

사회통합위 토론회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는 20일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6·2 지방선거평가와 정당공천제의 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고건 사회통합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지방선거가 본연의 중요한 역할을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면서 “정당공천을 둘러싼 비리와 부패, 인물과 공약 중심의 정책선거 부재, 1인 8표제 선거방식으로 인한 무관심과 혼란, 교육감 선거 등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연세대 이종수 교수는 발제에서

“정권심판은 대선과 총선을 통해 이뤄지도록 하고 지방선거는 지방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기초단체장의 경우 정당이 고려역할을 하는 정권심판 기능과 지역주의 지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방선거 종류를 줄임으로써 동시선거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면서 “대안은 광역의원 선거를 폐지하고 광역의회를 소속 기초단체가 인구비례에 따라 기초의원을 파견해 구성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실제적 효과가 없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교육위원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민간인 사찰’ 이인규씨 등 3명 사전 영장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이 21일 김종익(56) 전 NS한마을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사임을 요구한 혐의(형법상 강요 등)로 이인규(54) 전 지원관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사찰의 공

식적 책임자로 지목된 이 전 지원관과 사찰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김도점 1팀장, 원모 사무관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지원관 등은 2008년 9월부터 김씨가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김씨를 내사하고 NS한마을의 원청업체인 국민은행을 통해 그의 대표이자 사임과 지원 양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복지부 2차관 신설’ 법안 발의

민주당 주승용 의원(여수시울)은 21일 보건복지 분야의 중요성과 보건복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2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현재 정부 부처 중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 등 8개 부처가 2명의 차관을 두고 있으며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정원 2456명에 예산(일반회계 기준)은 1조 8000여억원이고 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정원 2138명에 예산은 1조 4000여원임을 고려할 때, 정원 2897명에 19조 5000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는 것은 결코 과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낙선 불구’ 유권자와 공약 실천 눈길



민중당 주승용 의원(여수시울)은 21일 보건복지 분야의 중요성과 보건복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2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6·2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에 출마했던 김대식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14년째 표류하던 목포시의 호남 최대 규모 35층 주상복합 건물 신축 사업을 성사시키는 등 전남지역 유권자와 약속했던 공약들을 실천해 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전 처장은 21일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호남 최대 규모의 35층 주상복합 건물 신축 사업이 드디어 23일 기공식을 갖는다”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목포지역 유권자와 약속한 이 사업의 성사를 위해 그동안 시공자인 LH공사는 물론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꾸준히 설득을 해왔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원 김대부동산의 매각 공고

구분	내역	면적	현재가	매각가	비고
1	○ 대부동 1-1길 21 (35평) 단독주택	35.00	1,000	600	원주 100%
2	○ 대부동 1-1길 21 (35평) 단독주택	35.00	1,000	600	원주 100%
3	○ 대부동 1-1길 21 (35평) 단독주택	35.00	1,000	600	원주 100%

김대부동산은 대부동 1-1길 21 (35평) 단독주택 3채를 매각합니다. 현재가 1,000만 원, 매각가 600만 원입니다. 원주 100%입니다.